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

A study on the financial structure of low-fertility household

박진영**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생활경영학과

Park, Jin-Yeong

Dept. of Human Ecology, Kyung Sung University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e-child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The data from 1022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and 236 one-child households were taken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2004). This study compared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marital characteristics between one-child households and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A chi-square tes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One-child households were different from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in demographic·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ructure. In one-child households, the variable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consumption expenditures was monthly income and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were householder's age, home-ownership, monthly income.

Key Words : one-child household,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I. 서론

2003년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49만 3천명으로 가입여성 1명당 출생아수(합계출산율)가 1.19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1.08을 기록하여 1970년 통계청이 인구통계를 낸 후 사상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수준 2.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사회전체적인 조로현상의 발생이 우려된다(정민자, 2004).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자녀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부담, 교육비의 증가,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 증대, 여성취업의 증가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증가, 결혼가치관의 변화, 초혼연령의 상승과 독신자의 증가 등 사회·경제

적 현상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걱정과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다. 출산율이 2.1에서 1.4 수준이 되는 데 네델란드는 29년, 일본은 30년이 걸린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6년 밖에 안 걸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2050년경에는 연금가입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선일보, 2006. 5. 23).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인구의 노령화가 노동생산성저하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일으킨 원동력이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51-C00057)

** Corresponding author: Park, Jin-Yeong
Tel: 051) 620-4659, Fax: 051) 611-2448
E-mail: pjy21kr@hanmail.net

노동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많은 조사와 이론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IMF 외환위기가 후에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명의 자녀에게 과거 2-3명의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나 교육비의 절감과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을 감안하여, 자녀1명으로 출산을 완료한 가정을 저출산가계로 정의하고,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가 일반가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과 관련된 재무적 요인들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문제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제시와 기존정책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한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은 개인 및 국민전체의 경제적 복지실현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로 인해 부부들이 아이낳기를 망설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저출산현상과 관련된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가치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부에서 조사한 '전국가족조사(2003)를 참고하였다.

1) 가치관의 변화

① 결혼관

과거 우리나라사람들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가치가 되었다. 미혼남녀에게 결혼계획 유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약 30%정도가 결혼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② 자녀에 대한 가치관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일정규모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가 많이 변화되었다. 미혼남녀에게 결혼 후 자녀의 필요여부를 묻은 결과 남성의 24.9%, 여성의 35.1%가 '자녀가 필요없다'고 대답하였다.

③ 개인주의

과거의 결혼관과는 달리 근래에는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져 가고 있다.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혼인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지 여부'(대통령비서실, 2004)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변화 조사결과 미혼남녀의 34.1%가 개인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43.5%)이 남성(27.0%)보다 혼인에 대해 개인 책임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으로 자녀의 보육 및 양육을 가족에게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의 경제참여 증대와 지위향상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사분담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은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남성은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퇴조하고 있다.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1990년에는 13.7%였으나 2002년에는 35.4%로 대폭 증가하였다(통계청, 1980-2002).

3)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증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계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녀의 수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문화된 인력을 원하고 이는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교육비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양육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1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70%가량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전체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132만원으로 1가구의 월평균 소득 지출액 234만원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4) 초혼연령상승 및 미혼인구증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초혼연령은 1960년에는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2002년에는 남자 29.3세, 여자 26.5세로 40년 동안 남자는 3.9세, 여자는 4.9세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미혼인구는 저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미혼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여성인구의 높은 미혼율을 예상할 수 있다(통계청, 2001).

5) 불임부부의 증가 및 인공임신중절의 지속적 증가

우리나라의 불임가정은 약 63만여 쌍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불임부부는 전체의 14.6%로 7~8쌍 중의 한 쌍이 불임부부이며, 매년 4만 쌍의 새로운 불임부부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불임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고액의 치료비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네델란드에서는 불임치료에 관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출생아 성비 불균형문제가 1990년을 고비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셋째아이 이후부터는 자연적 출생비(103:107)가 아닌 인공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남아를 출생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더욱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저출산의 원인은 5가지로 요약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다.

2.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의 문제를 고령화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은 곧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따라서 노인부양비의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 갈수록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전망된다.

1) 인구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2019년이면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구로 구성되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이 있었다(통계청, 2001). 또 2040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30.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약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년부양비와 노인부양비의 합인 총부양비는 2000년 39.5%에서 2010년 38.8%로 다소 낮아진 후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40.9%, 2030년 54.9%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유년부양비(0~14세인구/15~64세 인구)는 2000년 29.4%에서 출산력 감소로 인하여 2020년 19.6%, 2030년 19.1%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며,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는 2000년 10.1%이나 평균수명증가로 인하여 2020년 21.3%, 2030년 35.7%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는 생산가능인구 9.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7명당 노인1명, 2030년에는 2.8명당 노인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2000년 노령화지수(대통령비서실, 2001)는 34.3%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는 34명 정도이나 2030년에 이르면 186.6%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는 187명이 되어 초고령사회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부담율에 있어서도 1998년 22.9%, 102조원에서 2002년 28.0%, 167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3)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저축율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간 일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1.25~0.75%p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대통령비서실, 2004).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2050년 기간 중 연평균 GDP성장률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경제는 지난 10년(1992~2002년)동안 5.6%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10년(2003~2012년)사이에도 4.4%~4.6%의 성장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되는 201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경제성장은 총저축률 및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 등으로 2020년 3.1%, 2050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연금·의료제도·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 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적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

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개선 노력 및 의지에 따라 순조롭게 고비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1).

4) 노동시장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등 환경변화와 맞물려 임금·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인력의 고령화는 우리경제의 성장주력 산업의 고령화를 초래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과학·공학분야의 고령화는 젊은 층의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과 맞물려 첨단기술 인력 분야에 있어서도 공백상태가 우려된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보전을 위해서는 여성 및 고령자고용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다. 그러자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은 소폭증가, 고령자고용은 감소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로운 기술과 지식 등이 요구되는 외부환경 변화에 노동력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청년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존인력의 재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 구조가 지속된다면 전체인구의 고령화는 물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도 같이 진행될 것이다. 즉 노동가능인구의 전체적인 연령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된 노동의 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보험재정의 문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 연금수지 전망에 관한 문제와 재정수지 전망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수지에 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율이 급증하고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구조로 인해 현재도를 유지시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등 연금재정이 불안정하여 심각한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2001년 국민연금가입자 중 노령연금수급자는 3.7%에 불과하나, 2010년에는 13.3%, 2030년에는 41.9%, 2050년에는 88.5%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군인·공무원 및 교직원 등 공적직영연금의 적자발생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의 부담능력 초과가 우려된다. 따라서 세대 간 공평한 부담을 위해 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 등 구조개편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재정수지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근로인구 감소는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 따라서 세입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의 출산력 수준을 1.8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다(변준환, 2003).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및 노인의료·복지비용 등 재정지출의 급증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수지는 장기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고찰

먼저 저출산과 관련된 논문으로 우리나라 주부들의 이상 자녀수 감소 현상에 대해 연구한 김혜순(1982)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할수록, 남아선호도가 낮을수록 이상 자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대희와 김유경(1993)의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출산력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출산결정에 있어서 연령, 초혼연령, 피임사용 등 인구생물학적 요인들과 취업관계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역 등의 영향력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경제학이론(Economic Theory of the Family)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Becker, 1993; Bryant, 1990; Schultz, 1982). Espenshade(1984)는 한 자녀일 경우 가계소득의 약38%, 두 자녀일 경우 약 40-45%정도가 양육비로 지출된다고 하였으며 허경옥(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한 자녀 가계는 가계소득의 37%, 두자녀 가계는 46%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효용은 자녀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과 정비례하고, 여성의 기회비용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기혼여성의 시간비용 상승이 출산력을 감소시키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력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ecker, 1965; Cane & Dooley, 1976; Schultz, 1982).

재무구조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논문(차경옥, 2005)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와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구조를 비

교하고, 두 집단의 자녀양육관련 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성영애(2003)는 가구주 직업에 따라 연령별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계는 연령별 재무구조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농림수산업자나 비정규직종사자가계의 경우는 연령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이승신(2003)은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소득계층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재무관련 특성에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결국 가계의 사교육비지출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소득계층에 따른 현격한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보이며 특히 재무구조적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매우 큼에 따라 사교육비지출비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양육지원 또는 양육정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가족의 자녀를 돌봐줄 공적인 지원체계의 부족함과 부적절함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스트레스가 크며, 특히 가사에 대한 부담이 큰 여성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숙, 2004). 이재인 외(2005)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두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는 0-2세 아동의 주간보육과 모든 아동의 야간 및 주말보육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보육정책의 범위가 미취학아동에게 집중되어있어서 취학아동과 청소년자녀의 방과 후 보육에 대한 부담이 개별가정의 몫이라는 점이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의 일반적인 경향에 관한 연구(김태홍, 김난주, 2003)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조부모나 친지, 파출부가 기르는 비중이 높지만 아동의 연령이 3-5세가 지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 보육을 맡기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선미(2005)는 초등학생자녀를 기르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아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문화기술적인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녀양육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양육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흑실드(2001)는 직장에서의 시간을 줄여 가사를 분담하면 가족의 요구를 줄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요구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적으로 부부가 다 집안 일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정례(2005)는 외국의 저출산 관련정책과 국내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해봄으로써 현재의 저출산 관련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박미석 외(2004)는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은 복지만족도는 낮고 요구도는 높아 여성복지의 목표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나 양성평등실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반영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양성평등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책시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양성평등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공식화·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현미(2005)는 1985-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육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양육지원정책이 자녀양육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시기에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연규(2005)는 복지국가(OECD 22개국)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아동양육지원제도의 전반적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에 관한 논문들은 거의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참여, 저출산과 자녀양육비지출, 양육지원과 여성의 경제참여 등 저출산과 양육지원을 따로 분리하여 조사·연구해왔다. 양육지원이나 양육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는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제시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비교분석은 거의 없으며, 가계의 핵심구조인 재무구조에 대한 비교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재무구조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가계에 대한 양육지원 및 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복지정책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저출산 가계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부담정도는 어떠한가, 재무구조(자산과 부채, 가계수지상태, 각 비목별 소비지출규모와 재무비율)는 어떠한가? 이를 일반가계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총소비지출,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은 무엇이며,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분석자료 및 측정도구의 구성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2004년에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계를 일반가계로 보았으며, 총 1022가계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녀 1명으로 출산을 종료한 가계를 저출산가계로 보았으며, 총 236가계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가계는 자녀1명으로 출산을 종료한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연구의 명료화를 위해 본 연구대상인 일반가계의 자녀 간 터울을 산출한 결과 평균 2.7세로 나타났으므로, 자녀가 1명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4세 이상인 가구를 저출산가계로 정의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자료는 SAS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연령, 학력, 거주지, 자가여부, 주택종류, 사교육부담, 경제상태에 대한 인지,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 및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부담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 가계수지상태, 각 비목별 소비지출규모와 재무비율을 산출하였다. 집단 간(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총소비지출과 자녀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저출산 가계의 특성

저출산가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가구주 만나이는 41~45세 이하구간이 가장 많았고, 46세 이상이 가장 적었으며, 배우자 만나이는 35세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46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적었다.

가구주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이상, 중졸이하, 전문대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학력은 고졸, 중졸이하, 대졸이상, 전문대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는 시·군, 광역시, 서울특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입주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전·월세 및 기타인 경우보다 많았고, 주택종류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기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부담은 “부담된다”, “보통이다”, “부담되지 않는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에 대한 인지정도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31%로 거의 대부분의 가계에서 현재의 경제상태를 보통이거나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0.08%), 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부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저출산가계의 총사교육비 지출액은 25만 3천7백원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5점 리커트형 척도(“1=매우부담된다, 2=약간부담된다, 3=보통이다, 4=별로부담되지않는다, 5=전혀부담되지않는다”)로 측정된 결과, 평균 2.53점으로 보통이상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출산 가계와 일반가계의 특성 비교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1) 가구주 만나이

일반가계의 가구주 만나이는 저출산 가계에서의 비율 순위와 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가계의 가구주 만나이는 35세 이하와 46세 이상의 비율이 일반가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36~40세 이하와 41~45세 이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1$).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의 결정을 이미 가정형성기 초기에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는 무자녀로 있다가 늦은 나이에 한 자녀라도 갖기를 원하는 가정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배우자 만나이

저출산가계의 배우자 만나이는 일반가계에 비해 35세 이하인 경우와 46세 이상인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가계의 가구주 만나이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 저출산가계의 특성

변수	구분	저출산가계 빈도(%)	일반가계 빈도(%)	전체가계 빈도(%)	Chi-Square
가구주 만나이	35세 이하	56 (24.77%)	200 (19.80%)	256 (20.71%)	14.245**
	36~40세 이하	59 (26.10%)	309 (30.59%)	368 (29.77%)	
	41~45세 이하	60 (26.54%)	352 (34.85%)	412 (33.33%)	
	46세 이상	51 (22.57%)	149 (14.75%)	200 (16.18%)	
	전체	226 (99.98%)	1010 (99.99%)	1236 (99.99%)	
배우자 만나이	35세이하	91 (41.36%)	369 (36.50%)	460 (37.37%)	27.843***
	36~40세이하	60 (27.27%)	372 (36.80%)	432 (35.09%)	
	41~45세이하	46 (20.90%)	238 (23.54%)	284 (23.07%)	
	46세이상	23 (10.45%)	32 (3.17%)	55 (4.47%)	
	전체	220 (99.98%)	1011 (100.01%)	1231 (100%)	
가구주 학력	중졸이하	36 (15.92%)	95 (9.41%)	131 (10.60%)	8.447*
	고졸	98 (43.36%)	471 (46.63%)	569 (46.04%)	
	전문대졸	23 (10.18%)	120 (11.88%)	143 (11.57%)	
	대졸이상	69 (30.53%)	324 (32.08%)	393 (31.80%)	
	전체	226 (99.99%)	1010 (100.0%)	1236 (100.01%)	
배우자 학력	중졸이하	49 (22.27%)	107 (10.58%)	156 (12.67%)	29.641***
	고졸	97 (44.09%)	613 (60.63%)	710 (57.68%)	
	전문대졸	31 (14.09%)	115 (11.37%)	146 (11.86%)	
	대졸이상	43 (19.55%)	176 (17.41%)	219 (17.79%)	
	전체	220 (100.0%)	1011 (99.99%)	1231 (100.0%)	
거주지	서울특별시	55 (23.31%)	203 (19.84%)	258 (20.49%)	1.434
	광역시	66 (27.97%)	294 (28.74%)	360 (28.59%)	
	시·군	115 (48.73%)	526 (51.42%)	641 (50.91%)	
	전체	236 (100.1%)	1023 (100.0%)	1259 (99.99%)	
임주형태	자가	114 (50.89%)	569 (58.60%)	683 (57.15%)	4.414*
	전세, 월세, 기타	110 (49.11%)	402 (41.40%)	512 (42.85%)	
	전체	224 (100.0%)	971 (100.0%)	1195 (1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51 (22.77%)	194 (19.78%)	245 (20.33%)	1.671
	아파트	134 (59.82%)	586 (59.73%)	720 (59.75%)	
	다세대 및 기타	39 (17.41%)	201 (20.49%)	240 (19.92%)	
	전체	224 (100.0%)	981 (100.0%)	1205 (100.0%)	
사교육 부담	부담이 되는 편이다	104 (53.33%)	645 (70.72%)	749 (67.66%)	28.473***
	보통이다	62 (31.79%)	212 (23.25%)	274 (24.75%)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29 (14.87%)	55 (6.03%)	84 (7.59%)	
	전체	195 (99.99%)	912 (100.0%)	1107 (100.0%)	
경제상태	여유가 있는 편이다.	10 (4.31%)	55 (5.42%)	65 (5.22%)	0.480
	보통이다	103 (44.40%)	442 (43.60%)	545 (43.74%)	
	어려운편이다	119 (51.29%)	517 (50.99%)	636 (51.04%)	
	전체	232 (100.0%)	1014 (100.0%)	1246 (100.0%)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	식비	47 (19.92%)	192 (18.79%)	239 (19.00%)	31.825***
	의료비	8 (3.39%)	15 (1.47%)	23 (1.83%)	
	교육비	71 (30.08%)	467 (45.69%)	538 (42.77%)	
	주거비	14 (5.93%)	30 (2.94%)	44 (3.50%)	
	빛의 원리금 상환	40 (16.95%)	150 (14.68%)	190 (15.10%)	
	차량유지비	11 (4.66%)	19 (1.86%)	30 (2.38%)	
	통신비	0	3 (0.29%)	3 (0.24%)	
	세금	1 (0.42%)	6 (0.59%)	7 (0.56%)	
	없음	43 (18.22%)	132 (12.92%)	175 (13.91%)	
	기타	1 (0.42%)	8 (0.78%)	9 (0.72%)	
합계	236 (99.99%)	1022 (100.1%)	1258 (100.0%)		

* p<.05 ** p<.01 *** p<.001

3) 가구주 학력

저출산가계의 가구주 학력은 일반가계에 비해 중졸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은 중졸이하의 가구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자녀양육을 더욱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배우자 학력

저출산가계의 배우자학력은 일반가계에 비해 고졸만을 제외하고 중졸이하와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직업지위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저학력계층은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 때문에 저출산을 결정하고, 전문대졸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업지위가 높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은 가능하지만 자기실현 등의 이유로 저출산을 결정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우영 경제제도연구실 과장이 작성한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결혼모형을 통해 여성의 결혼 의사 결정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고교 졸업 이하에서는 결혼이 증가하다가 고교 졸업 수준 이상이 되면 결혼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결혼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결혼 확률은 낮아지지만 일단 결혼을 하면 고학력 여성의 출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배우자의 교육연수가 1년 늘어나면 여성의 출산 확률은 0.23%포인트 상승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여성의 출산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확률이 1.2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에 아들을 출산한 여성의 경우 아들이 없는 여성보다 출산 확률이 7.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선호 사상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들을 출산한 여성은 다음 출산의 성별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여성의 출산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아들을 원하는 부부에게 이미 딸이 있는 경우 출산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되고 이는 출산의 연기나 태울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연합뉴스, 2007. 8. 23).

5) 거주지

저출산가계의 거주지는 일반가계에 비해 서울특별시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군(郡)이하의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시(市)지역은 출산 확률이 0.9% 낮아지며 특별시, 광역시

의 경우 5.6%나 낮게 나타난 결과(연합뉴스, 2007. 8. 23)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 압박이 높고 생활비,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입주형태

저출산가계의 입주형태는 일반가계의 경우보다 전·월세 및 기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7) 주택종류

저출산가계의 주택종류는 일반가계에 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8) 사교육부담

저출산가계의 사교육부담은 일반가계에 비해 "보통이다", "부담되지 않는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p<.001$),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많은 일반가계의 사교육비지출액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9) 경제상태에 대한 인지정도

일반가계의 경제상태에 대한 인지도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가 5.42%로 4.31%인 저출산가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0)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

저출산가계의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0.08%), 일반가계에서도 45.69%의 가계가 "교육비"를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인지하였다($p<.001$).

11) 사교육비지출과 부담정도

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부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저출산가계의 총사교육비지출액은 25만 3천7백원으로 일반가계의 40만 5천1백원보다는 금액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사교육비는 저출산가계가 25만 3천7백원으로 일반가계의 19만 6천2백원보다 약5만7천5백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이든, 비경제적 요인이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출산을 선택한 가계는 비록 한 자녀이지만 일반가계의 한 자녀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보다

<표 2> 저출산가계의 사교육비

(단위: 만원)

	저출산가계(N=236) 평균(표준편차)	일반가계(N=1022) 평균(표준편차)	t-test
총사교육비	25.37(20.24)	40.51(32.56)	6.160***
1인당사교육비	25.37(20.24)	19.62(15.45)	-4.394***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2.53 (1.06)	2.11 (.95)	-5.540***

*** p<.001

: 5점 리커트형척도로 측정됨(1=매우부담, 2=약간부담, 3=보통, 4=별로부담안됨, 5=전혀부담안됨)

<표 3> 저출산가계의 자산 및 부채

(단위: 만원)

	저출산가계(N=236)		일반가계(N=1022)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은행예금	1313.15	3907.57	1132.84	2630.62	-.857
주식/채권/신탁	302.97	2194.37	141.04	953.98	-1.750***
저축성보험	100.94	341.08	132.35	474.39	.961
아직 타지 않은 계	10.93	89.68	18.43	160.64	.693
빌려준 돈	86.02	770.93	138.76	1276.84	.609
기타금융자산	7.37	80.67	13.83	295.33	.333
총금융자산	1821.38	5558.47	1571.57	3546.04	-.865
거주부동산	9046.36	12992.33	9718.17	12565.78	.736
거주외부동산	1607.20	7609.76	1825.32	7080.02	.421
임차보증금	266.95	1012.19	335.97	1254.31	.788
총부동산	10920.51	15373.81	11879.46	15010.25	.881
총자산	12741.89	18205.69	13451.04	16470.07	.584
금융기관부채	1629.11	2715.58	2184.18	4452.67	1.838*
비금융기관부채	75.08	683.75	29.40	218.64	-1.780***
빌린 돈	214.83	872.36	259.70	1660.22	.402
임대보증금	398.73	1969.80	557.41	2786.55	.828
부어야할 계	3.22	36.11	8.31	118.58	.653
기타부채	2.97	45.57	.68	21.89	-1.133*
총부채	2323.94	3545.04	3039.70	6008.72	1.760*
순자산	10417.95	17715.38	10411.34	15201.05	-.006

* p<.05 ** p<.01 *** p<.001

는 더 많이 지출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는 적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한 결과 일반가계의 부담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많아서 사교육비의 전체지출액이 많은 일반가계의 부담정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

1) 저출산가계의 자산 및 부채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상태, 가계수입과 지출 및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분석하였다.

저출산가계의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및 부채의 규

모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주식/채권/신탁 자산의 보유금액이 더 많았으며, 비금융기관의 부채와 기타부채의 금액도 많았다. 그러나 금융기관부채금액이 일반가계가 월등히 많아 총부채금액은 일반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출산가계의 가계수지상태

저출산가계의 가계수지상태는 다음과 같다<표 4>. 가계수지상태를 파악하기위해 2004년도 가계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보았다. 또한 월평균생활비와 월평균저축액을 합한 금액에 12를 곱한 연간총지출을 통해 가계지출을 산출하였다.

저출산가계의 가계소득으로는 근로소득이 약2천9백1만

<표 4> 저출산가계의 가계수지상태

(단위: 만원)

	저출산가계(N=236)		일반가계(N=1022)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계소득	근로소득	2901.69	1920.35	3352.72	2422.54	2.973**
	금융소득	597.94	1136.25	390.28	1249.78	.534
	부동산소득	1352.00	1589.06	1928.67	4111.53	.759
	사회보험소득	84.57	45.72	409.36	504.77	2.388*
	이전소득	218.65	439.22	211.79	554.07	.912
	기타소득	1561.43	3283.25	1415.70	2510.40	.889
	연간총소득	2962.23	2163.53	3560.00	2809.57	3.548***
가계지출	월평균생활비	63.37	77.44	70.57	90.06	4.882***
	월평균저축액	162.82	79.64	194.78	92.99	.985
	연간총지출	2517.71	1563.63	3043.58	1786.22	4.169***
가계수지	402.21	1192.87	509.67	1990.99	.782	

* p<.05 ** p<.01 *** p<.001

<표 5> 저출산가계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단위: 만원)

	저출산가계(N=236)		일반가계(N=1022)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식비	31.98	14.23	39.13	18.34	6.565***
외식비	7.18	7.16	7.30	8.30	.229
공교육비	3.28	7.73	5.84	18.20	3.371***
사교육비	20.58	18.87	34.49	31.28	8.863***
차량유지비	18.03	17.25	19.51	15.96	1.205
주거비	15.78	13.12	15.42	11.20	-.392
경조사비	5.05	5.56	5.37	5.52	.798
보건의료비	3.72	6.07	3.66	7.99	-.126
문화비	3.61	5.27	3.55	6.31	-.129
내구재	3.09	9.18	2.95	7.89	-.221
통신비	10.65	5.48	12.87	6.87	5.331***
용돈	16.01	16.24	18.46	17.03	2.072*
피복비	4.71	3.87	5.84	5.76	3.627***
헌금 및 각종 기부금	3.12	13.15	3.01	14.10	-.110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8.48	8.13	10.74	9.26	3.748***
대중교통비	3.31	3.64	3.48	4.47	.638
기타	3.73	15.92	3.28	15.55	-.399
월평균소득	246.85	180.29	296.67	234.13	3.548***
월평균생활비	162.82	79.64	194.78	92.99	5.376***
월평균저축액	63.37	77.44	70.57	90.06	1.088
한계소비성향	.9989	1.5133	.9039	2.0191	-.800

* p<.05 ** p<.01 *** p<.001

7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타소득으로 1천5백6십1만원이었으며, 연간 총소득은 2천9백6십2만원이었다. 연간총지출은 약2천5백1십7만원으로 가계수지는 약402만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약33만5천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에 일반가계는 근로소득이 약33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소득으로 약1929만원이었으며, 따라서 총소득은 3560만원으로 약510만원의 흑자를 이루어서 월평균 약42만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에 비해 근로소득, 사회보험소득, 연간총소득, 월평균생활비, 연간총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저출산가계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저출산가계의 소비지출은 다음과 같다<표 5>.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은 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통신비, 용돈, 피복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로서 이 모든 항목에서 일반가계의 소비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생활비도 일반가계의 액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저출산가계의 재무비율

다양한 재무비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총자산/총부채비율은 부채상환능력을 파악하기위한 비율이며, 1보다 적으면 부채상환불가능상태이며 1보다 크면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 모두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투자자산/순자산비율은 가계의 자산증식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가계의 자산 중에서 주식/채권/신탁과 저축성보험, 타지 않은 계를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때 투자자산은 순자산의 25%이상 차지할 때 적절하다고 보았다. 저출산가계는 22%로 나타나 25%에 근접하며 따라서 자산증식을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가계는 9%로 나타나 자산증식을 위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연간부채상환금/총연간소득비율은 연간총소득 중에서 상환해야할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이 값이 크면 부채부담이 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값이 30%이하인 경우 안정적인 재무상태라고 평가한다.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경우 모두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부담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주택외부채상환금/총연간소득비율은 연간소득 중에서 주택이외에 상환해야할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20%이하일 때 안정적인 재무구조라고 평가한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이 비율은 2%로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가계의 경우는 81%로 주택이외의 부채상환부담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주택관련부

채이외에도 상환해야 될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가계의 효율적인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동자산/월지출비율은 소득이 중단될 경우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며, 저축을 제외하고 월지출의 6배정도의 유동자산을 형성할 경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평가된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11.6배, 일반가계의 경우 약8.8배정도의 유동자산을 형성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간저축과 투자/연간총소득비율은 연간 총소득 중에서 저축과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가계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경우 둘 다 저축과 투자자산의 비율이 5%로서, 이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무비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자산을 고려한 부채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연간총소득에서 상환해야할 부채부담은 아주 심각하며, 저축과 투자자산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자산증식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p<.05), 유동자산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p<.05). 주택이외의 부채상환비율이 저출산가계는 2%로 매우 낮으나 일반가계는 81%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계보다 재무구조가 더 안정적인 저출산가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저출산가계의 특성이 소비지출과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월소득으로 나타났다<표 7>. 월소득액수가 클수록 소비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표 6> 저출산가계의 재무비율

	저출산가계(N=236)		일반가계(N=1022)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자산/총부채비율	5.15	6.89	6.56	16.08	1.026
투자자산/순자산비율	0.22	0.55	0.09	0.31	-1.653*
연간부채상환금/총연간소득비율	1.88	2.87	1.97	5.45	.192
주택외부채상환금/총연간소득비율	0.02	0.04	0.81	19.73	.467
유동자산/월지출비율	11.60	16.19	8.82	13.38	-2.091*
연간저축과 투자/연간총소득비율	0.05	0.03	0.05	0.04	-.039

* p<.05

<표 7> 저출산가계의 특성이 소비지출과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총소비지출		사교육비지출	
	B	beta	B	beta
가구주만나이	2.299	.189	1.506	.460***
배우자만나이	-.298	-.027	-.280	-.122
자녀만나이	.295	.040	-.182	-.119
자녀성별	-3.277	-.019	-6.629	-.175
가구주학력	15.898	.235	1.352	.091
배우자학력	.246	.004	-1.131	-.081
현재경제상태	-14.598	-.142	-5.599	-.236
거주지(R:시·군)	-9.986	-.094	-3.378	-.151
자가여부	3.190	.019	9.255	.255*
아파트여부	-6.497	-.037	-6.788	-.175
순자산	.000	-.072	.000	-.120
월소득	.315	.603***	.055	.493**
월저축액	-.089	-.054	-.022	-.062
상수	15.588		-2.082	
R ²	.575		.472	
F	7.081***		3.924***	

* p<.05 ** p<.01 *** p<.001

R: 준거집단(Reference group)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만나이, 자가여부, 월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만나이가 많을수록, 비자가에 비해 자가인 경우에, 월소득액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의 연령과 주부의 연령은 거의 비례하므로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지출이 많다고 한 이승신(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주택소유가 자가인 경우에, 그리고 총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박진영(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교육비지출은 가구주의 연령과 가계소득이 가구주의 퇴임 전까지 평균적으로 상승해 감을 고려해보면, 결국 가계소득, 자가여부 등 경제적인 여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한 학벌중시 풍토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가계에 대한 양육지원 및 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복지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위하여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재무구조의 차이를 분석해보고

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는 가구주 만나이, 가구주 학력, 배우자 만나이, 배우자 학력, 입주형태(자가, 비자가), 사교육 부담정도,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에 있어서 일반가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담이 되는 지출비목은 “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부담에 대한 조사 결과, 총사교육비, 1인당사교육비,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에 있어서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가계의 자산과 부채규모분석에서,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주식/채권/신탁 자산과 비금융기관 부채 및 기타부채가 많았으며, 일반가계는 금융기관부채가 월등히 많아 총부채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수지상태분석에서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에 비해 근로소득, 사회보험소득, 연간총소득, 월평균생활비, 연간총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계소득과 소비지출분석에서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에 비해 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통신비, 용돈, 피복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지출액, 월평균소득, 월평균생활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재무비율을 통한 재무상태분석에서,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자산증식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p < .05$), 유동자산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p < .05$). 주택이 외의 부채상환비율이 저출산가계는 2%로 매우 낮으나 일반가계는 81%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계보다 재무구조가 더 안정적인 저출산가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저출산가계의 특성이 소비지출과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월소득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만나이, 자가여부, 월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영향력은 57.5%와 47.2%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재무구조의 차이를 이해하고, 재무구조분석을 통해 저출산 감소를 위한 양육지원정책 및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무자녀인 경우에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한 자녀가계를 저출산가계로 보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출산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무자녀가계도 저출산가계에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재무구조차이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통한 양육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개발도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 저출산가계, 일반가계, 재무구조

참 고 문 헌

-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05-116.
-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홍, 김난주(200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미(2005). 양육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1982). 한국 부인의 이상 자녀수 감소 변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 기획단 인구·고령사회 대책팀(2001-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233-261.
-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4).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 정책. *대한가정학회지*, 42(2), 195-212.
- 박진영(2006). 자산계층별 사교육비지출과 재무성과의 관련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61-77.
- 변준한(2003). 기혼유배우 여성의 자녀수결정 요인분석; 20~44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애(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1), 39-58.
- 여성부(2003). 한국가족조사 및 가족조사 보고서.
- 연합뉴스(2007. 8. 23). 고학력 여성, 일단 결혼하면 출산율 높아. 출처: <http://news.naver.com>.
- 이미숙(2004). 아동의 정서기능과 지각된 부모행복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11), 151-169.
- 이재인, 김선미, 김은정(2005).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05-2.
- 정민자(2004).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천방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가정정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57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조대회, 김유경(1993). 최근의 출산력 변동요인과 인구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선일보(2006. 5. 23). 저출산 겹벌 일만은 아니다. p.7.
- 차경욱(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 통계청(1980-2002). 인구동태통계. www.nso.go.kr.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 한국여성개발원(2002). 여성통계연보.
- 허경욱(1997).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1-19.
- 혹실드 알리 러셀(2001).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여자. 백영미 옮김(2001). 서울: 아침이슬.
- Becker, G.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ecker, G. S.(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yant, K. W.(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e, G. G. & Dooley, M. D.(1976). Estimation of a model

of labor supply, fertility and wages of married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4), 179-199.
Espenshade, T.(1984).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ultz, T. W.(1982).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3. 7 접수; 2008. 7. 11 채택)